



“몸도 마음도 청춘”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제1회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부부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후보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 85개팀 11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대상은 황대일(72)·안영자(69) 부부가 선정됐다.

“일본 사회 본질 비켜갔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0일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관련,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본질에서 비켜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치 100년이 갖는 의미의 본질에서 비켜간 담화”라며 “한일합방의 불법성과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적으로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없어 ‘99년’ 후생연금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딸 죽는 꼴 보고싶으십니까”

판사, 70살 할머니에 또 막말 파문

일부 판사의 인격모독적인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모(여·70)씨는 손녀 이모(24)씨와 함께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 대신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

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함몰이 아니거든요”라며 신씨에게 감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

함께 있던 손녀 이씨는 판사의 폭언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여기고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정판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연남뉴스

시간강사도 국민연금료 절반 지원 받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6만8000명의 대학 시간강사와 2만7000여명의 단시간 근로자 등 10만명 정도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부담하게 된다. /연남뉴스

Weather forecast section titled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for Gwangju. It includes a map of the region, a table of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districts, and a 7-day forecast. The forecast shows a mix of sun and clouds with temperatures ranging from 24°C to 31°C.

학원 심야교습 밤 10시 제한 조례 시·도의회 승계해 심의

서울을 제외한 광주·전남 등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뻔 했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밤 10시) 조례안이 살아남아 각 시·도의회에서 논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이 이달 말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시도의 교육위에서 계속 심의하면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보면 사무승계 규정이 있다”며 “법률이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자동 승계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임기 만료 및 폐지와 동시에 9월부터 그 역할을 맡는 시·도의 교육위가 관련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서정성 광주시의회 교육위 간사는 “교과부가 유권해석을 한 만큼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오는 9월부터 시의회 교육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

7조는 ‘종전 교육위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일체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는 8월 말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지되고 그 역할을 새로 구성되는 시도의회 교육위(상임위 중 하나)가 맡게 되는데, 이때 기존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던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이 새 교육위의 안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책의 하나로 전국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키로 하고 올 초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 제정을 지시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교육청은 조례안 심의를 ‘시기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원업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교육위 임기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조례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하면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일반적으로 회기가 끝나면 의안도 자동 폐기되는 게 상례였

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관련 법률 검토 결과,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새로 구성되는 시·도의회 교육위에 승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교원평가 자율로” 교육감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평가 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대전 스페리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방법 개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권 교육감 위임, 학교 정원경찰 운영방법 개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남뉴스

Advertisement for 'Speech Leadership Course' (스피치 리더십 과정) by '수강생 모집' (Recruitment of Students). It lists course objective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wangju Education Center.

Advertisement for '아이앤리시아' (Ainreasia) featuring 'High Quality Menu, Healthy Taste, and Excellent Service (500석 침베)'. It includes a list of menu items and contact details for the restaurant.